한국경제학보 제11권 제2호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11, No. 2 (Autumn 2004)

〈기념강좌〉

茶山의 개혁사상과 한국 농업의 活路*

김 성 훈**

요 약

정다산의 학문 세계를 개혁사상에 초점 맞추어서 오늘의 농업문제에 비추었다.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도하개발의제의 발족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농업, 농촌, 농민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유기농업의 도입, 새로운 유통체제, 도농연대의 상생방법을 제시한다. 끝으로 다산의 三農政策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도시와 농촌이 고루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핵심 주제어 : 다산, 一表二書, 三農政策, 도하개발의제, 유기농업

Ⅰ. 一表二書의 철학과 지향

"… 하늘의 총애를 받고 태어나
어리석은 충심(衷心)을 갖게 하였기에
정밀하게 육경(六經)을 연구해 내서
미묘한 이치까지 밝혀내었도다.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세력을 잡았지만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긴히 쓰려 키웠으니
시신(저서들)을 잘 거두어 잘 묻어 둔다면
훗날 높고 멀리까지 그 쓰임이 있으리라."(박석무 역주, 1988)[1]

---

* 본 논문은 2004년 11월 26일에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 제7회 효정 이순탁 교수 기념강좌에서 발표한 내용임.

** 중앙대학교 교수(상지대학교 총장 피선), 전 농림부 장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우편번호 156-756, kimsh011@yahoo.co.kr

1) 한시를 필자 자의로 해석하였다.

이 글은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 선생이 회갑년인 61세 때 미리 지은 자기의 묘지명 끝에 실린 자작시의 일부분이다. 茶山의 인생역정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사건은 다름아닌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황사영 백서(黃嗣永 帛書) 사건 연루 의혹이다. 그로인해 1801년, 그가 40세 되던 해에 억울한 죄목으로 전라도 강진(康津) 땅에 유배되어 장장 1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귀양살이를 해야 했다. 선생과 가족 그리고 당시의 뭇백성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손실이었으나, 후세의 목민관들과 만백성들에게는 그의 유배시절 만고에 길이 빛날 주옥같은 저술 500여 권을 남겨 나라와 겨레가 올곧게 살아갈 길을 비추어주었다는 점에서는 역설적으로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기회였다.

다산 선생의 나이 57세 때인 1818년 귀양에서 풀려 9월 13일 노처와 자식들이 기다리던 고향땅 남양주 마재(능내리)로 돌아와 1836년 75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정침(正寢)할 때까지 18년을 더 살았다. 그가 살아 온 삶은 문자 그대로 경세제민(經世濟民), 즉 세상을 다스리고 민생(농어민과 서민)을 살리기에 고심해온 일생이었으며 훗날에도 나라와 백성들을 넉넉하게 살게 하려는 일념뿐이었다. 특히 그의 아명(兒名)이 "귀농(歸農)"이라 불리운 만큼 이름값에 못지않게 다산은 한평생을 농촌·농업·농민 사랑(愛民)하기를 자기 자식을 키우고 아끼는 것보다 더했다.

1. 茶山의 학문과 사상의 연원

茶山의 일생은 한 마디로 말하여 "芝蘭(지초와 난초)의 향기"와 같다고나 할까. 아무리 심산궁곡에 피어났다 하더라도 산 너머 강 건너 사방으로 퍼져 가는 그 향기를 감출 수 없고, 어느 한 곳 한 시절에만 묶어 둘 수가 없다. "芝蘭의 향기는 천리에 뻗고, 님의 유덕(遺德)과 위업(偉業)은 만대에 이른다."라는 옛말이 바로 茶山 선생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후손 정규영(丁奎英)은 다산의 저술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다가, 부지부식간에 "신라, 고려, 조선을 통틀어 이만한 업적을 낸 이가 또 누구이더냐!"라고 감탄하였다. 茶山이야말로 우리 역사상 실로 전무후무하다 할 만큼 광범위한 연구업적을 남겼다는 점에 대하여는 茶山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다산은 1822년 회갑을 맞아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짓고,[2] 한 걸음 더 나아가 먼저 떠난 형제, 동지, 제자들 가운데 아주 가까웠고 기억되어야 할 분들이 묻힌 곳을 찾아 직접 묘지명을 써주거나 기록을 남겼다.

자찬묘지명에서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을 온 소감을,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지만, 20년 동안 속세일과 벼슬길에 빠져 옛날 어진 임금님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大道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야 여유를 얻었도다!"라고 하며 아주 기뻐하였다. 그 얼마 앞서 한양의 옥중에 갇혀 있었을 때 하루는 꿈결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 꾸짖기를, "소무(蘇武, 한 나라 때의 충신)는 19년이나 참고 견디었는데, 지금 그대는 단 19일의 괴로움도 참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꾸짖어서 벌떡 깨어났더니 그 날로 옥살이가 풀렸다. 딱 19일째 된 날이었다. 茶山이 1818년 귀양이 풀려 고향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경신년(1800) 천주교사건으로 벼슬자리를 내놓고 이듬해 귀양길에 올랐던 때로부터는 꼭 19년째가 되었다. 다산은 옥중에서 꾸었던 꿈속의 노인이 꾸짖은 말이 너무 신기하였다. 그래서 자탄하여 말하기를 "정말로 인생의 화(禍)와 복(福)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느냐?"라고 하였다.

정약용은 4세에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7세에 시를 짓고 10세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하였다. 그 주변에는 당대 신진 사류(士類)로 분류되는 약현(若鉉), 약전(若銓), 약종(若鍾) 등 친 형님들을 비롯 위로는 채제공(蔡濟恭), 권철신(權哲身), 이벽(李碧), 이가환(李家煥), 이승훈(李承薰, 자형) 등 그 이상의 스승이 없다고 할 만큼 높은 학덕을 갖춘 분들이 다산의 실학(實學)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들 거의 대부분이 당시 소수 정파(政派)이었던 남인(南人) 출신으로서 학문적 뿌리는 성호 이익(星湖 李瀷, 1681~1763)의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유교 사상에 두고 있었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 다산은 실학파의 효시(嚆矢)라 할 반계 유형원(磻溪 柳馨園, 1622~1673)의 경국제세(經國濟世)적인 실사구시

2) 자찬묘지명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앞 단락에서는 자기 생애에 대해 적었고, 뒤 단락에서는 학문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했다. 묘지명은 집중본(執中本)과 광중본(壙中本) 두 가지가 있는데, 문집에 수록하려고 기술한 집중본이 더 상세하고 풍부하다. 다산 연구의 필수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18~19세기 조선 사회·역사·정치·경제 연구에도 큰 의의가 있다. 자찬묘지명이 기록하지 못한 회갑(1822) 이후 사망(1836) 때까지의 14년 동안의 생애에 대해서는 1920년 丁奎英이 「俟庵年報」에 잘 편찬해 두었다.

사상을 계승하고,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의 지치(至治)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다산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어릴적 성호 이익의 저술을 읽고 학문할 뜻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3] 이는 스스로 실학파(實學派)에 속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귀양살이 18년 동안에 맨 먼저, 시(詩), 서(書), 역(易), 예(禮), 낙(樂), 춘추(春秋)등 6경과 대학(大學), 중용(中庸), 논어(論語), 맹자(孟子) 등 4서의 경전(經典)에 대하여 재해석을 시도했고 이를 연구서 232권으로 저술하여 다산 나름의 새 해설서를 내놓았다. 유배중 강진 초당에서 한편 한편의 책을 탈고할 때마다 인편으로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던 형 약전(若銓)에게 보냈는데 그 때마다 훈수를 할 만큼 약전의 학문수준은 뛰어났었다. 마침내 연구서 232권을 다 읽고 나서 형 약전은 "네가 (신명이 통하고 저절로 깨닫게 되는) 이런 경지에 도달한 것은 너 스스로도 모를 것이다. 도(道)를 잃어버린 지 천년 동안 백 가지로 가리어져 덮여져 있었는데 이를 분해해서 확 열어 제쳤으니 어찌 너의 힘만으로 한 것이겠느냐"라고 극찬의 글을 써 보냈다.

또 시(詩) 작품집으로는 6권, 잡문(雜文)이 60권 등 조정에 있을 때 지은 것을 포함하여 도합 70여 권이다. 다산의 시 세계는 크게 보아 그 시대 민중의 고통과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는 '사회시(社會詩)' 형태의 것이 있고, 아울러 정조조의 초계문신(抄啓文臣)이며 죽란시사(竹欄詩社)의 대표적 시인으로서의 풍류와 자연을 노래한 '서정시(抒情詩)'로 나누어진다.[4] 특히 다산의 사회시는 애절양(哀絶陽), 산늙은이(山翁), 굶주리는 백성들(饑民詩), 백련사 솔 뽑는 중(僧拔松行), 용산촌, 아전 詩 등과 같이, 당시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호남지방에 극성했던 탐관오리와 지방관리(아전)에 의한 토색 행패와 극심한 국고 탕진 현상 그리고 백성들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삶의 모습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기이한 것은 한때 크게 번성했던 이 지방의 중요 토산품과 특산품이었던 비단, 황칠(黃漆), 인삼 등 토산품들이 가렴주구의 수탈행위에 견디다 못

3) 茶山이 16세가 되던 해인 1777년에 정조대왕이 즉위하였는데 그 때 다산은 성호 이익의 유고를 처음 읽고 성호의 학문을 준칙으로 삼았다. "나의 미래에 대한 큰 꿈은 성호 선생을 따라 사숙했던데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다산은 자주 말하곤 했다. 박석무 (2003, p. 111)를 참조하시오.

4) 자세한 詩文의 원문 및 번역, 해설은 송재소 (1988)와 대우학술재단 (1986), pp. 223~294의 송재소・김홍규・김상홍을 참조하시오.

해 이 무렵부터 하나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마치 해방과 6·25 이후 미국 잉여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가격경쟁력을 잃고 목화, 삼, 옷배, 조, 옥수수, 밀, 녹두, 팥, 보리, 콩 등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시장경제 및 무역자유화의 어두운 단면과 대조된다.

2. 다산의 志向과 가르침

다산은 이른바 잡찬(雜纂) 형식의 책으로 「경세유표(經世遺表)」 48권, 「목민심서(牧民心書)」 48권, 「흠흠신서(欽欽新書)」 30권, 「아방비어고」 30권,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10권, 「마과회통(麻科會通)」 12권 등 도합 260여 권을 저술하였다. 다산이 역술(力述)한 총 500여 권의 저서 중 「흠흠신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강진, 그것도 주로 다산초당에 유배되어 있던 기간에 쓰여졌다.

「경세유표」는 우리나라 관제(官制), 군현제(郡縣制), 전제(田制), 부역(賦役)과 조세(租稅), 군제(軍制), 과제(科制) 등 각 행정분야의 제도와 기구 및 그 운영방법에 대하여 당장의 실행가능 여부를 떠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개혁대상으로 망라하고 있다. 다산을 두고 불후(不朽)의 '개혁사상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감히 임금(王)과 통치자도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큼 개혁적인 주장과 철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라고 다산은 자신의 학문자세를 밝히고 있다(정약용, 1805).

「목민심서」는 법을 토대로 해서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려야 한다. 요즘 말로 人治가 아닌 法治주의를 밝히고 있다.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을 세 기둥으로 삼고,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을 6전(6典)으로 만들어, 진황(振荒)을 한 단원으로, 하나의 조목마다 6조(條)를 포함했다. 고금의 사례와 이론을 찾아 간위(奸僞)를 밝혀 "목민관으로 하여금 단 한 사람의 백성에게라도 혜택을 줄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마음씀이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오랜 유배생활 중 나이가 들어 장차 회갑을 바라보게 됨에 따라 스스로 다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그러나 치민지도(治民之道)라도 남겨 당대와 후세의 목민관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해 봉직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마음에

서, 이름하여 '심서(心書)'라고 붙인 것이다.[5]

「흠흠신서」는 다산이 귀양에서 풀려 고향에 돌아와 저술한 사법질서와 지방정치개선, 그리고 인명(人命)을 좌우하는 재판에 관한 지침서이다. "사람의 목숨을 책임 맡은 자가 자기의 할 바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유교의 경전과 역사 기록을 기본으로 삼아 사물의 선악, 시비, 미추(美醜) 등을 평가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잘잘못을 헤아리고 바로 고치게 한 다음, 옥석을 가려 감옥에 보내 감시케 하려는 뜻"에서 집필하였다. 이로써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자나 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자 모두가 원통하다거나 누명을 썼다는 억울함과 원한이 맺히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다산 스스로 말하기를 "'6경4서'로써 자기 마음과 몸을 닦게 하고,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흠흠신서」, 즉 '1표2서(一表二書)'로써 천하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게 하고자 하니, 이로써 본(本)과 말(末)이 구비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고 꾸짖는 사람만 많다면, 천명(天命)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 속에 처넣어 불살라 태워버려도 좋다."고 적고 있다. 아무래도 이 무렵 다산은 심신이 과민(過敏)했던 듯하다(自撰墓誌銘 및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참조).

다산은 귀양 초기 좌절과 방황에서 헤매다가 일찍 여읜 그 어머니 해남 尹씨 일가의 도움을 받아 귀양 8년째 되던 1808년부터 강진군 도암면 귤동 다산초당에 칩거하여, 앞서 소개한 경학(性理學)을 필두로 역사, 지리, 천문, 과학, 농업, 의학, 음악, 시문 등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 걸쳐 주옥같은 글들을 저술하기 시작하였다. 다산은 그의 「속유론(俗儒論)」에서 "참된 선비의 학문이란 치국안민(治國安民)하고, 오랑캐를 물리치며, 재용(財用)을 넉넉히 하고, 문무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어찌 문장이나 찾고 글이나 베끼고 넓은 선비의 옷을 입고서 절하는 것만을 익히는 것이 학문이겠느냐?"라고 갈파한다. 여기에 다산의 학문 탁마(琢磨)의 지향(志向)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본다. 역설적인 평가일지 모르지만, 강진에서의 귀양살이가 다산으로 하여금 더욱 처절하게 실학(實學) 사상에 입각한 불후의 명저들을 남길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

5) 「목민심서」는 후대의 목민관들에게 적지않은 가르침을 주어 월맹의 불굴의 지도자 호치민이 베갯머리 맡에 항상 비치하고 치세의 거울로 삼았다고 알려질 만큼 동양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2편 72조 48권으로 이루어진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심혈을 다해 저술한 요즘말로 관료와 목민관들의 벼슬살이 바이블(聖書)이다. 공교롭게도 「목민심서」는 1818년 귀양살이에서 풀려나기 직전에 완성을 보았다. 그가 1~2년만 더 일찍 해배(解配)됐더라도, 어쩌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은 월맹(越盟)의 불세출(不世出)의 영웅 호치민이 생전에 베갯머리 맡에 두고 치국치민(治國治民)의 지도서로 삼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3. 구원(久遠)의 개혁사상

다산 저술과 그 사상의 요체는 "개혁(改革)"이다. 그가 살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은 조선 봉건사회의 해체기(解体期)로서 누적된 봉건적인 병폐가 도처에 드러나 있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의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고 바로 세우는 길은 개혁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산은 깊이 통찰한 것이다. 그 시작은 모름지기 관료와 정치지도자들의 마음과 몸가짐의 쇄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믿고, 구체적인 개혁대안서인 「경세유표」의 완성에 이어 「목민심서」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33세(1794) 때 일찍이 그는 경기도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몇 개 고을을 암암리에 순찰하고 몇몇 탐관오리들을 탄핵했다. 이 순찰 길에서 그는 환곡(還穀)과 군포(軍布)를 둘러싼 지방관들의 협잡과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전 생애를 일관하는 민중 지향적인 사고의 출발점이 된다. 이로 인해 같은 고을 출신의 정승(당시 경기도 관찰사) 서용보(徐鏞輔)의 미움을 사 그로부터 일생 동안 시달림을 받았다.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자." 新我之旧邦의 다산 정신은 500여 권의 방대한 저서 가운데 그 3분의 1이 정책관련 개혁론(改革論)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나 있다. 조선왕조는 임진·정유 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 등 엄청난 규모의 국난을 겪으면서 왕조 재정과 민생파탄, 그리고 3정(三政)의 문란이 극도에 달하였다. 시대적으로는 봉건왕조체제의 무능과 당쟁의 병폐가 끝이 없었고, 나라의 운이 특정정파의 정략과 실정으로 크게 기울고 있었다(대우학술총서, 1995). 3정(三政)이란 토지정책(田政), 군대정책(軍政), 구호양곡관리(還穀)제도를 두고 말한다. 백

성들로부터 받아들이는 토지조세제도와 군대 관련 징포(徵布)제도 및 정부 양곡을 봄에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받아들이는 환곡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각종 횡포와 병폐가 극심하여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꺼지게 할 정도이었다. 남부여대(男負女戴)의 이농·이촌 행렬이 줄을 잇고 남은 사람들은 백골징포(白骨徵布)에, 묵은 밭(白地) 세금, 어린이 어른 똑같이 매긴 세금 (黃口簽丁) 등 갖가지 세목(稅目)비리와 국정문란으로 산업생산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민생은 문자 그대로 도탄에 빠져 있었다. 앞서도 잠깐 설명한 바 있지만, 다산은 애절양(哀絶陽), 기민시(飢民詩) 등 사회시를 통하여 이 같은 불의(不義)를 고발하고 1표2서를 통하여 그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마침내 다산은 조선조 초기 개혁가 삼봉(三峯) 정도전(鄭道伝)과 마찬가지로 "군주와 목민관 등 통치자가 백성(民)을 제대로 사랑하고 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라는 민본(民本)사상(이익성 역주, 1984, pp. 89~92)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무위무능하고 부패한 군주(君主)나 목민관을 백성들이 바꿀 수 있다는 역성혁명적(易姓革命的)인 사상을 피력한 배경이 이러하다. 본디 역성혁명론을 주창한 원조는 맹자(孟子)이었다. 임금(紂王)이라 할지라도 인(仁)과 의(義)를 해쳐 임금답지 못한 임금은 죽여도 좋다는 뜻의 말을 하였다. 정도전도 공자와 맹자의 영향을 깊이 받아 조선왕조 개국 후 1394년「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임금의 자리를 바르게 하는 원리를 밝히고 있다. 민심을 얻으면 백성은 군주에게 복종하지만, 민심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군주를 버린다(조유식, 2001, pp. 140~143).

다산 선생이 강진에 유배중에 있었을 때(1797) 그가 도호부사로서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황해도 곡산(谷山)에서 다시 폭동이 일어나고 곧이어 홍경래 난(洪景來 亂, 1811~1812)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접한다. 다산은 즉시 전라도 유생(儒生)들에게 이를 토벌할 것을 주장하는 통문을 띄웠다. 그 내용을 일별하면, "주권(主權)은 원칙적으로 백성에 있고, 그 담당자는 국왕을 비롯한 양반관료층이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이상, 국가의 반란을 진압하는데도 백성이 선봉에 서야 한다."는 주장(고승제, 1995, pp. 465~476)을 폈는데, 이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라의 원래 주인인 백성들이 임금과 목민관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찍이 다산은 1797년 36세의 나이로 곡산부사로 부임하여 과감한 행정개혁을 단행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준 바 있다. 특별히 곡산에서 천연두 기술서인 「마과회통(痲科會通)」 12권을 완성하게 된 계기도 바로 백성을 살려내려는 충정 때문이었다. 곡산부사로 재임한 1년 7개월 동안 다산은 여러 가지 중요한 체험을 했다. 그로서는 지방행정의 실무를 처음 맡아본 셈인데 이 기간 동안 그는 백성들의 뼈저린 생활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 하급관리들의 비행이 어떻게 국가와 백성의 삶을 멍들게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후일 지방관들의 행정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목민심서」를 저술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곡산부사 시절의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해 보면, 그가 부임하던 날 이계심(李啓心)이란 자가 10여 항목의 건의서를 가지고 다산 앞에 나타났다. 이계심은 전임 부사 때 그곳 백성 1,000여 명을 이끌고 관가로 쳐들어가 사또의 부정을 항의하다가 쫓겨난 도망자의 신분이었다. 요즘말로 지명 수배중이던 농민 데모대의 대장격이었던 인물이다. 이러한 그가 스스로 다산 앞에 나타난 것이다. 당장 체포하자는 주위의 권유를 물리치고 그는 "한 고을에 모름지기 너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원통함을 폈으니 천금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너와 같은 사람은 얻기가 어려운 일이다.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라 했다. 다산의 한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는 일화이다.

「목민심서」에서도 "민(民)과 목(牧)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며 牧이 그 자리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봉공(奉公)과 애민(愛民)을 잘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은 백성(民)이며, 국가는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仁政)를 펴야 한다는 민본주권론(民本主權論)을 펴고 있다. 이 같은 개혁사상이 시종여일하게 다산의 모든 저작과 주의주장의 기조(基調)를 이루고 있다.

4. 다산의 농업철학과 산업진흥론

뿐만 아니라, 다산은 지주제도의 폐해를 혁파하는 토지개혁론(田論)을 주창한다. 그는 반계의 공전론(公田論)과 성호의 한전법(限田法)을 뛰어넘어 '경자유전(耕者有田)'과 '협동경영'의 원칙에 입각한 여전법(閭田法)을 제안한다(이익성 역주, 1984, pp. 15~29). 농민이 농민으로 존재하려면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확고히

하되 공동경영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였다. 농민을 농지의 주인으로 삼는 입민지본(立民之本)은 오로지 농지의 재분배를 통해서 세울 수 있다고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주장을 펴는 등 다산의 농업관은 대단히 원칙적이면서도 시사성과 실천성이 뛰어 났다.

원래 "농업이란 하늘(天時)과 땅(地利)과 사람(人和)이라는 3재(三才)가 어울려 농업의 道(이익성 역주, 1984, pp. 161~166)를 일군다. 그 중에서도 민과 관이 화목하고 서정이 올바라야 농정이 바로 설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天地人, 즉 자연과 인간이 화목하고 조화를 이뤄야 농사가 바로 선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친환경적 친자연적 농업관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농업은 태생적으로 세 가지 불리점(不利点)이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농업·농민살리기 3농(三農)정책(이익성 역주, 1984, pp. 225~248)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첫째는, 대저 농사란 장사보다 이익이 적으니, 정부가 각종 정책을 베풀어 "수지맞는 농사(厚農)"가 되도록 해주어야 하며,

그 둘째는, 농업이란 원래 공업에 비하여 농사짓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 경지정리, 관개수리, 기계화를 통하여 농사를 편히 지을 수(便農)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셋째는, 일반적으로 농민의 지위가 선비보다 낮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 비추어 농민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上農)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만일 농업·농민을 이처럼 우대하지 않으면 바다를 건너 막대기를 벗 삼아 이민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토로할 만큼 농업·농촌 문제를 나라와 겨레 발전의 필수기본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농민들에 대한 관료와 토착세력들의 수탈을 고발한 "애절양"이나 "기민" 詩와 같은 수많은 시문을 통해 사회정의 확립과 농정의 바른 길을 깨우쳐 준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다산은 또한 상업(商業)을 발전시켜 생산과 부(소득)를 늘리되, 특권을 갖는 상업이라든지 매점매석은 억제하고 중소생산자와 소상인은 보호해야 한다는 현대적 상업관(商業觀)을 주창하였다. 즉, 정부는 도매(市廛) 상인들의 과도한 독점권(禁亂廛權) 행사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통공(通共) 정책을 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6] 세도정치나 특정권력에 기생하거나 지

방 토호세력 및 아전세력들과 결탁한 늑매(勒買, 강제로 사게 하는 행위)와 호상활매(豪商猾賣, 특권적인 매점매석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지금도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그 외에도 그가 주장하고 일부 실천한 바 있는 과학기술개발론(科學技術開發論)이라든지 광산국영론(鉱山國營論), 조세 및 화폐 제도 개선론 등은 지금도 가히 탁견이라 할 만큼 당시의 사회경제 여건에 비추어 아주 빼어나다.

다산의 개혁사상은 경제부문 이외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오늘날의 고시, 즉 과거제도(科擧制度)의 폐지, 중화사상(中華思想)의 거부와 민족주체의식의 강조, 신분·당파·지방 차별제도의 타파와 공평하고 공정한 인재등용(이익성 역주, 1984, pp. 216~221), 오늘날의 향토방위체제에 해당하는 민보의(民堡議) 제창 등, 행정 및 정치·사회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양반(兩班)이 되면 군포(軍布)도 안내고 이른바 놀고먹을 수 있는 썩은 제도, 문벌주의, 지방차별, 적서(嫡庶)의 차별, 당파 차별 등 각종 차별정책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다산이 되풀이하여 강조한 분야는 현대적 의미의 부정부패(不正腐敗) 척결론이다. 탐관오리와 아전들의 횡포를 척결하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도, 백성들의 편안함도, 부국강병도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부단히 그 대안을 찾아 개혁정책의 전파에 노심초사한 것이다.

5. 茶山 사상의 현대적 의미

다산이 강진에 귀양온 지 3년째 되던 1803년과 14년째인 1814년, 중앙 정치무대에서 두 차례나 곧 해배가 될 사안이 일어났는데도, 그 때마다 정적들의 악랄한 반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세월은 흘러, 꿈에도 잊지 못하던 둘째 형 약전(若銓)은 동생의 해배 소식을 고대하다가 1816년 절해의 고도 흑산도 유배지에서 「현산어보(玆山漁譜: 우리나라 최초의 물고기 도감)」 한 권을 남기고 외로이 병사하고 만다. 다산이 형을 잃은 시름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고인 생전에 뛰어난 학식으

6) 정조대왕 당시 좌의정 채제공이 건의하고 국왕이 여러 신하에게 물어서 채택한 "신해통공(辛亥通共)" 개혁정책에 茶山의 기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정조실록).

로 그를 격려, 자문해주던 저술활동을 더욱 강도 높게 계속하는 일뿐이었다. 마침내 1817년 불후의 명저인 「경세유표」를 끝내고, 그 이듬해(1818) 「목민심서」를 마무리(8월)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18년의 귀양살이가 풀린다.

귀향(歸鄕) 길에 오르기 전 8월 그믐날, 다산은 18명의 제자와 함께 다신계(茶信契)를 만들고 강진 다산초당의 뒤치다꺼리 일들을 신신당부한다. 그리고 나서야 18년 전 귀양 올 때 형(약전)과 함께 걸어왔던 한양으로의 길을 터벅터벅 홀로 걸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2주가 지난 9월 13일 마현 고향집에 도착하였으나 노처와 아이들의 얼굴빛이 굶주림에 처량하다. 그런데도 귀양길을 떠날 때 기록해 두었던 재산목록과 비교하여 더 불어난 여유분 재산은 친지들에게 나누어주도록 조치한다. 다산은 여생을 주로 고향집에 칩거하며 우리나라 제례(祭禮) 모음 책인 「흠흠신서」를 완성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먼저 떠난 옛 친구와 지인들의 묘지명 지어주기, 산수유람하기 등으로 자유인이 되어 다음 세상을 조용히 준비하고 기다린다.

그리하여 부인 洪氏와의 결혼 60주년이 되는 회혼일(回婚日) 아침, 즉 1836년 음력 2월 22일 辰時(아침 7~9시), 茶山 丁若鏞 선생은 마재(馬峴) 자택에서 고요히 눈(正寢)을 감았다. 다산이 이승을 하직하는 날 마지막 남긴 그의 시문 「회혼시(回婚詩)」는 지금도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한다.

> "6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 날아갔으나,
> 복사꽃 무성한 봄빛은 신혼 때와 같구려.
> 살아 이별, 죽어 이별에, 사람은 늙었지만
>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에 감사하오."
> (박무영 역, 2001, p. 4)

유언에 따라 부부는 지금 마재 여유당(与猶堂: 겨울 시내의 살얼음판을 건너듯 조심하고 삼간다는 뜻) 뒤 언덕의 한 무덤에 나란히 누워 있다.

Ⅱ.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한국 농업의 희망찾기

1. 위기하의 한국 농업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는 아시아 계절풍 영향하의 온대지역으로서, 4계절 24절기가 뚜렷하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생대 지질학적 특수성 때문에 예부터 한반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은 맛이 좋고 품질 좋기로 유명하다. 한국 산야의 농림산물 중 약초와 보약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일컬어져 왔다. 3천리 조국의 산하와 그 일부분인 우리나라 농림축수산업이 하늘과 땅과 물과 바람의 도움으로 비좁은 우리 한반도 땅에서 어언 7,000여 만의 인구를 번창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농업은 바야흐로 21세기 새천년을 맞아 존망의 기로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한국 농업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의 현 단계 정치·경제 여건이 유독 우리 농업·농촌·농민 부문에 대하여는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의 국면이나 다름없다. 아름답고 기름진 조국의 산천은 이제 환경파괴와 오염투성이로 점점 그 몰골이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생명농업을 천직으로 삼고 영농에 종사해오던 농어민들의 살길이 날로 막막해져 하나둘 농촌을 등지고 있다. 이와 같이 그 좋았던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갈 길과 희망을 잃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도 "농(農)의 본질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 배경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오랜 기간 인구가 번창하다보니 땅값이 세계 최고로 비싸서 생산비가 아주 높아 세계 각국의 농축산물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뚝 떨어진다. 땅값이 미국의 10배, 호주의 20%나 높아 농업생산비 중 토지용역비가 절반(46%)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의 경우 토지용역비를 뺀 생산비는 미국산 캘리포니아 칼로스와 비교할 경우 1.8배가 된다. 토지용역비를 포함할 경우 4배 가까이 높다. 다른 한편, 농가 평균경지면적은 일본, 대만, 중국과 비슷한 1.4ha로 미국 등 선진농업국의 100분의 1 이하이다. 게다가 고도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이농 현상으로 도시인구는 과밀하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농가인구는 날로 고령화·부녀화되고 있다. 또 도농간에 교육, 문화, 복지, 도로, 교통, 통신 시설서비스 역시 격차가 커 농촌생활의 질이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있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협정 타결(1993. 12. 15)과 세계무역기구 가입(1995. 1. 1)으로 인해 한국 농업시장은 쌀의 부분개방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개방(open market)되어 값싼 외국 농림축산물이 전천후 전방위로 대량수입되고, 설상가상으로 2001년 11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값싼 중국산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됨에 따라 한국 농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제와서는 어느 누구도 외국 농산물의 수입홍수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도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1997년 말 IMF 환란위기로 인해 농축산물 가격파동에 따른 농가경제 파탄이 일어났고 농가부채가 급증하였다. 이에 덧붙여 관세와 보조금을 대폭 삭감 또는 철폐하려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협상은 이미 시작되었고, 2004년 한·칠레 FTA협정의 발효로 과실류와 포도주, 돼지고기 등이 봇물처럼 밀려들고 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2004년의 UR 쌀 시장 추가개방협상도 연말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셋째, 무릇 농업이란 하늘(천시)과 땅(지리)과 사람(인화)의 3재(재)가 어우러져 번성하는 법인데, 농업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非交易的 공익기능(multifunctionality)으로는 비교역 특성인 자연생태계와 환경 보전효과, 문화전통의 계승, 국토의 균형발전, 식량안보와 안정성, 경관유지 기능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유독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산업, 여론주도층에는 희박하다. 이 같은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유독 우리 사회지도층들이 무지하고 상당수의 국민들도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의 필수조건인 농업·농촌의 쾌적성(amenities)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한국사회 지도층과 언론계의 농업관은 "끝내버려도 좋은 낙후산업"이라는 잘못된 단순비교우위논리에 젖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농업보호정책에 이해의 각을 세우고 있는 재계와 그들의 영향을 민감히 받고 있는 경제부처 및 언론기관일수록 그러하다.

넷째, 정부는 1994년 우량농지를 보존한다는 명분하에 절대농지(65%) 제도를 폐지하여 농업진흥지역(48%)으로 지정하는 농지법을 개정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을 고쳐 비진흥지역농지(52%)를 모두 건교부 소관하에 맡겨 손쉽게 비농업용으로 전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 전 국토의 난개발 현상과 토지투기 행위가 시작됐다. 어느새 전국의 농경지는 지난 10년 사이 20여 만 ha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바뀌었다. 양곡자급률은 27%로 떨어졌고 쌀 자급률도 96%선에 머물고 있다. 기타곡물의 자급률은 모두 합쳐봐야 5%도 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매년 150~200만 톤에 달하는 구조적인 식량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서울 등 대도시 주변의 농지와 산지 70% 이상은 이미 비농업적 투기 대기자들에 의해 편법, 불법으로 소유되고 있다. 이러할 때 도시자본을 농촌에 끌어들이기 위해 추가적인 농지규제 완화, 그것도 진흥지역마저 풀겠다는 2004년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농업포기정책이며 쌀농사 죽이기나 다름없다. 논면적 80만 ha만 있으면 쌀자급에 족하다는 어느 연구소의 왜곡 편향된 용역보고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는 곧이곧대로 믿고 농지법을 고치려 들고 있다.

끝으로, 세계농산물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들이 WTO체제 아래서 아예 초국경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으로 변신하면서 미국과 케언즈(Cairns)그룹 등 농산물수출국들의 막강한 정치력을 배경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약, 비료 등 화학물질과 첨단 생명공학을 무기로 하여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대기업적 식량생산=수출과 GMO(유전자변형농산물)와 같은 식품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가족농업체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한국 농업은 가격·비용 경쟁력 면에서는 그들과 감히 상대가 못된다. 이들이 다시 제2의 WTO/DDA협상에 임하여 이번에는 농축산물 수입관세 철폐와 보조금의 대폭축소 등 완전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공정한 무역, 환경생태계와 지역사회유지, 농가보호육성, 식량주권이라는 NTC 기능은 뒷전에 밀리고 있다.

이 모든 국내외 여건은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으로서는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산 첩첩, 물 겹겹, 그러나 또 한 길이…

이쯤해서 옛 성현이 노래했던 시 한 구절을 떠올려 보자.

"산 첩첩 물 겹겹 길 없는가 여겼더니
검은 구름 뿌연 버드나무 숲 사이
또한 마을이 있는 것을 …"
(山疊水重疑無路 黑雲暗柳有一村)

지나온 한국 5천년 역사가 그러했듯이, 한민족의 피와 살과 혼이 되어 온 한국 농업의 운명도 고비마다 아슬아슬하게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 살 길을 찾아 왔다. WTO 자유무역체제와 중국이라는 호랑이가 한국 농업에 생과 사의 갈림길을 위협하고 있지만, 동시에 범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설과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라는 호기회를 맞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의 물꼬가 다시 트여 WTO체제하 한국 농업의 활로와 북한 주민의 살길이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은 21세기 세계 인류의 지향이며 운명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발전시키는 친환경적인 생산·소비·유통구조를 전제로 한다. 자연생태계와 인류의 공존공영(共存共榮)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3의 상생의 시스템 건설이 현 단계 우리 인류의 범지구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각국은 농약 오염, 환경파괴, 광우병과 구제역병을 겪으면서 화학적인 관행농법 대신 친환경농업(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에의 길로 돌아서기에 이르렀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도 유기농을 주축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정책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쿠바는 일찍(1991) 인류역사의 최대의 실험이라는 전국적인 유기농업 운동에 성공, 이제는 지구촌의 유기농업의 표본으로 부상하였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필연코 생산성도 올리고 환경생태계와 생명을 살리는 21세기 현대사조의 큰 흐름을 타고 있다. 천만다행이라 할지, 친환경농업은 대규모 기업농업으로는 원활히 경영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한국과 같이 소규모 가족농업이 지식경영을 첨가할 경우 훨씬 더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선진각국의 경험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나아가서 소비자와 농업생산자가 친환경농업을 매개로 서로 상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생공존하려는 「도·농연

대」 움직임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사회 기반 유기농업(Community Support Agriculture) 운동이라든지 지역사회 식품안보(Community Food Security) 운동, 일본의 지산지소(地山地消) 운동 등이 도·농 연대의 산 표본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소·정 협력의 일환으로 녹색체험 운동(Green Tourism)과 농산어촌 어메니티 살리기 운동 등이 활발하지만 지역사회 단위의 지산지소운동과 학교 급식활동이 일부 정부당국의 비협조로 아직 초보단계이다.

한편,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는 그 동안 산업사회체제하에서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비교열위산업(比較劣位産業)으로 인식되었던 농업부문에게 바야흐로 역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즉, 새로운 친환경 시스템에로의 일대 전환의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를 뒷받침하는 정보와 기술과 지식이라는 새로운 생산요소를 농업부문이 여하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현대농업에 분명 새 지평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생산, 가공, 유통 전 분야에 걸쳐 첨단과학기술과 정보기술, 그리고 새로운 생산 및 유통·판매 기법(지식)의 응용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의 동향은 IT(정보기술), BT(생물공학 기술) 그리고 ET(환경기술)를 가장 우위의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분야가 다름 아닌 농업분야임이 지구촌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심지어 개방체제하의 농산물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 기술을 응용할 경우, 유통 및 무역상 큰 애로를 겪었던 농업부문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한의 농업협력은 WTO체제하에서 수입과잉에 의한 국내 과잉생산체제와 국내시장 축소, 그에 따른 가격 및 소득 감소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 단계 남한 농업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해준다. 전통적으로 남의 논농사와 북의 밭농사 간의 호환적인 협력관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당장은 남의 과잉공급, 북의 만성적인 부족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상호 필요에 의한 계약재배농업을 비롯 품종, 품목, 자재, 기술, 유통판매 분야 등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남한 농민의 살길이 북한 주민의 살길과 직결되는 분야가 농업분야 만큼 절실하고 시급한 곳이 없다고 말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듯 사면초가로 길이 막힌 곳에 새 길을 뚫고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한국 농업의 희망찾기 첫걸음이라고 본다.

2. 한국 농업의 활로 전략

이상에서 우리는 WTO개방체제하에서 소규모 가족농이 살아갈 길과 한국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 가냘프나마 동이 트는 새벽길처럼 곧게 굵게 뻗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농업이란 상업보다는 이익이 박하고, 공업에 비하여는 힘이 더 들며, 선비(전문직 종사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훨씬 낮은 세 가지 불리점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어느 나라에서 농업은 태생적으로 기후조건 등 자연적인 제약이 있고, 유기적인 생물을 다루어야 하는 기술적인 제약이 따르며, 국내외 수급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극심한 경제적 제약점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농업이 갖고 있는 식량공급 및 다원적 공기능(公機能)으로 인해 국가와 민족형성 및 발전의 필수조건(이른바 national minimum requirement)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정부와 소비자로 하여금 앞서 말한 농업의 세 가지 불리점과 세 가지 제약성을 보완, 지원해 줄 생명공동체 의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업의 기본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통(universal)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1) 농가소득안전망(Farm Income Safety Net)은 필수

그렇기 때문에 선진 각국이 국내총생산액(GDP)과 총인구에 농업과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두루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하에 적극 농업을 보호, 육성 지원해 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농업생산력의 주체인 농가의 소득체제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WTO가 허용하는 한, 각종 소득직접지불제(direct payment)의 확대실시와 명실상부한 농업재해보험 지원, 농가부채 소각 및 경감 대책, 그리고 유통 및 가격안정장치를 최대한 작동시켜야 한다.

특히 적절한 유통과 가격안정대책이 적극적인 농가소득 안정대책임은 물을 나위가 없다. 이미 정부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하여, 농업관측제도(農業觀測制度)를 보완하고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를 도입하였으며, 도매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전자경매와 전자

상거래 그리고 직거래제도와 수출농업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생산농가 및 유통 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조건이 되어 있다. 농가소득 안정망체제는 끊임없이 보강, 보완되어야 한다.

2) 농업도 정보 산업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농업이 IT, BT, ET 분야의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화기술 등을 이용하여 역전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농어민들이 이른바 신지식농업인이 되어야 한다. 농업 자체가 이제 자연과 인간 사이, 소비자와 농가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쌍방관계를 제대로 설정했느냐 여하에 따라 성공하고 실패하기 때문이다.

우선 농업이 지리적 불리점과 태생적 불리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되는 분야가 정보화이다. 농업정보화가 성공하려면 농가의 정보통신 기술교육 강화, 농촌의 인프라 구축에 의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그리고 정보의 콘텐츠 확충 들을 들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농림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국민의 정부' 역점사업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 그런 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2년까지 17만 명의 정보화 교육, 세계 최초의 '이동 정보화교육 버스(기네스북에 2001. 4. 등재)' 운영, 지방대학 교수와 학생을 이용한 '농업정보 119' 사업실시, 정보통신부와 협력 이미 전국의 읍면지역까지 초고속 통신서비스(ADSL) 확충,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의 활성화, 농산물 시장정보의 실시간 제공, 1999년부터 통합농산물 전자쇼핑몰(www.acim.or.kr)의 개설 운영, 농림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등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보다 내실있는 정보화 지원정책을 강구하여 농업인의 학력과 경력, 나이에 관계없이 첨단농업기술이나 정보화 기술을 이용, 농가부가가치를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신지식농업인을 발굴, 육성하는 일은 미래농업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역대 정부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45세 미만의 젊은 영농후계자를 그 동안 12만 명이나 육성해 왔는데 이들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재무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농촌·농업·농가 생활의 핵심인 여성농업인을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한다. 특히 쿠바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농촌 여성인력을 친환경 유기농업운동의 핵심요원으로 육성하고, 농가 식품가공 및 유통의 주역이 되도록 하여 농가의 부가가치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고품질 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21세기 한국 농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요요소이다. 특히 농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실용기술과 미생물과 폐자원을 재활용한 생산성 향상기술, 농업자원의 순환농업체제 구축, 생명공학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작물개발 및 유기축산발전 대책, 농작업의 자동화기술개발 등이 신지식 농업인의 육성대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3)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이제는 농업도, 축산도, 임업도 모두 첨단과학 기술과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친위생적인 농·축·임업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약과 비료 등 화학물질의 투입을 최소 또는 전폐화하고 흙(지력)을 살리고 물과 공기를 맑게 하며,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농업이 되어야 소비자를 감동시켜 그 반대급부로 농가의 소득이 보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은 소비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살리는 농법이다.

정부는 1998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계기로 친환경농업 원년을 선포하고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여 우리 농업을 통상적인 정밀농업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토양의 양분을 종합관리(INM)하고,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방제(IPM)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유기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지혜를 빌어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비화학적 현대과학기술과 접목시키고 순환농법과 농가자원의 리사이클링(recycling) 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의 농가 또는 지역단위에서의 가공 및 유통망 확대를 위한 기술·자금 지원과 품질을 보장하는 인증제 역시 더욱 보강하여야 한다.

4) 고지식, 고기술, 친환경 농업의 새 「엔진」을

무엇보다도 위기의 한국 농업이 21세기 극렬한 국내외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WTO 차기협상등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우리 농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켜내는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이득이 별로 없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상 추진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뿐

만 아니라, 정부부처 17개 중에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하나도 없다. 부처 이상의 수준(예, 총리실)에서 농업정책을 총괄, 독려 감독할 장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상의 전략들을 추진할 농정주체는 이제까지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2단계 농업관련 협동조합 개혁 및 지방농림관련조직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속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무거운 「엔진」을 가지고서는, 고지식·고기술·친환경적인 농업과 유통혁신 및 수출 확대, 그리고 남북한 농업협력을 이끌어 나가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Ⅲ.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파장(波長)

1. 최악의 시나리오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시작된 WTO/DDA협상은 앞으로 농정의 향방을 결정하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2003년 10월 멕시코 칸쿤에서의 WTO/DDA 각료회의가 전세계 NGO들의 일치된 반대로 다국적 농산물 수출국들의 뜻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연기되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전술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농산물 수출국 및 초국경기업들의 계획대로 제2의 UR인 WTO/DDA협상 역시 시간표상 약간의 차질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2006년경에는 관세와 관세쿼타의 대폭적인 완화,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보조의 대폭 삭감,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및 농촌개발에 있어서 그 기준의 하향표준화(harmony), 농업의 NTC 기능 무시, 교역에 있어 경쟁문제와 노동문제 및 환경문제의 연계 불인정, 특별긴급관세제도(SSG)와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의 축소조정 등으로 결말될 것이 예상된다.

이 중 어느 의제 하나도 한국 국민경제와 소비자·농민의 사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할 만큼 DDA협상은 중차대하다. 특히 UR 협정체결로 다 열어놓은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을 FTA, WTO/DDA협상등

을 통해 완전히 장악하려는 농산물 수출국과 초국경기업들의 음모에 부화뇌동하는 세력이 정치권과 재계 및 언론계에 준동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후손의 경제와 삶의 질, 환경과 건강생명문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WTO/DDA협상이 만약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이해의 불균등한 반영, 그리고 소비자·농민·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패배와 피해로 얼룩진다면 하나뿐인 지구촌의 미래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는 개도국과 농산물 수입국 그리고 NGO 사이에 지금 범세계적으로 크게 번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미 1993년 UR협정과 1995년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산물 수입시장이 완전개방된 한국 농업부문에 한정하여 차기 DDA협상이 초래할지 모를 달갑지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 내지 폐지화와 관세할당량의 증가로 인해 한국 농축수산물 중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품목이 거의 사라질지 모른다.

② 그에 앞서 중국의 WTO 가입(2001. 11)으로 인해 그 동안 미국 및 케언즈그룹의 공세(농산물 수입홍수)로부터 간신히 연명해 오던 채소, 과일, 특수작물, 화훼, 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이 무차별한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DDA협정은 결정적으로 한국 농업을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중국 농민들은 국가 소유의 농지 이용에 있어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③ 2004년 쌀 시장 추가개방 협상이 쌀 수출국들의 뜻대로 결말될 경우 우리나라의 쌀 농업은 거의 전멸할 것이고 그로인해 환경생태계의 파괴와 황폐화 그리고 농촌지역사회의 붕괴로 인해 도시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고통 받고 한국 경제의 지속성 역시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④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현존하는 긴급특별관세제도(SSG)와 농업소득 안정망제도(예, 직접지불제도 및 green box에 의한 농업보조 등)가 만약 DDA협상결과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국 식량농업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장차 국가주권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⑤ 이러한 때 정부가 첫 협상대상으로 칠레를 선택하여 맺은 자유무역

(FTA)협정이 2004년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농업부문 협상여건(관세 및 보조금의 대폭 축소 내지 零稅化)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여러 이유로 DDA협상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마저 유지할 수 없을지 모른다.

⑥ 뿐만 아니라, UR협정에 따라 2004년부터 쌀 의무수입(MMA, 2004년까지 최소시장접근율을 1986~1988년 기준 국내 소비량의 4%) 규모의 추가개방 내지는 관세화(tariffication)를 선택해야 할 쌀 수입개방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확고한 대응논리를 찾지 못함으로써 쌀 수입시장이 봇물처럼 터질지도 모른다.

⑦ DDA협상에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특별조치가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식품안전(food safety)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더욱 완화될 경우 구미식단에 있어서는 비중이 낮은, 그러나 우리 전통식단에 있어서는 비중이 아주 큰 쌀, 보리, 채소(김치) 및 전통식품에 대한 국민건강 안전기준이 흔들리고 홍수처럼 밀려들어 오는 불안전한 외국 농산물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 유지에 적신호가 예상된다.

⑧ 그리하여 우리의 주곡인 쌀 및 기초식품의 식량안보가 농산물수출국의 풍흉 및 정책에 의존하게 되고 환경생태계 보전 및 농촌개발의 상대적 후진성이 가속화된다. 구소련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의 경우에서 보듯 공업 및 군사 분야는 강할지 모르나 사실상 농산물 수출선진국에 의해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예속이 강화될 비자주국가로 전락할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2. WTO협상 대응전략

이상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해 볼 때 우리의 대응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명해진다.

첫째, 지난 UR협상 때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① 정부 각 부처의 통상관련 담당자를 전문화시켜 순환보직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통상업무와 협상에 전념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처의 통상관련 부서에 국내외 전문가와 법률가를 고정 배치 내지는 계약고용하여 통상협상에 범정부적으로 공동이용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 통상(협상)관련 정보와 자료를 관계이익단체는 물론 NGO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지를 모아나가야 하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NGO"가 협력하여 합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④ 다자간 통상협상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을 양보(희생)하는 대가로 비농업부문의 이익을 얻어내거나 맞교환(trade-off)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우 각 품목별 이해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UR협상 때는 우리 정부 협상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국내 산업계와 농업부문 간에 불필요한 편 가르기와 비교우위논쟁마저 일으켰으나 결국 협상실패만 경험해야 했다. 따라서 WTO/DDA협상에서의 우리나라 협상전략은 마땅히 각 산업부문이 상생할 수 있는 win-win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대중 정부 초기 설립한 외교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한 한·중 마늘협상이라든지 한·칠레 FTA 사례에서 보듯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볼 때, 이 조직은 명백한 정부조직 실패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 비추어 그 기능을 각 부처의 고유협상 영역으로 분산 이관해야 한다. 주요 협상지침은 국회의 법률적 뒷받침을 받아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USTR(미 대통령 직속의 무역위원회)식 통상교섭본부는 공세적인 통상협상 체제하에서는 유용할지 모르나, 대부분 수세적인 협상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음이 이미 입증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셋째, 지난 UR협상이 농산물수출국과 선진국 그리고 초국적대기업들(Trans-National Corporations)의 일방적인 이익을 반영하며 종료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차기 WTO협상에서는 균형된 이익(balance of interests)을 실현시키기 위해 농산물 수입국과 개도국 간에 느슨할지라도 동맹 또는 행동통일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국내적으로는 정부, 국회, NGO가 국제연대 행동을 강화하는 범국민적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농업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환경생태계 및 문화전통 보전, 지역사회 유지와 국토균형발전, 식량안보 및 식품안정성 보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Multi-Functionality, 즉 NTC 기능) 보전에 대한 장치를 국내정책

에서는 물론, 차기 WTO협상 조건에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차기 WTO협상에서는 농업의 생산, 유통, 교역 조건이 공업의 그것과는 전혀 다름(non-equal footing)을 반영하는 논리의 개발과 행동지침을 WTO 회원국의 관계정부간, 국회의원간 그리고 세계 NGO간에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합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로,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소비자의 최대관심사항인 친환경 유기농업의 정부지원을 적극 지지하고, 다른 한편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을 비롯한 각종 식품첨가제와 색소 그리고 방사선조사 처리 등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지도 모를 조치들에 대해서는 규제와 규격을 엄격히 하는 논의가 WTO 식품위생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지난 UR협상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남북한간 교역이 내국간 교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조항이 WTO 차기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UR협상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있어 국내농산물 공급이 미국의 경우(WTO 조달협정에서 National Lunch Act에 의한 Buy American의 허용)처럼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UR협상이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로 타결된 다음에야 부랴부랴 사후대책을 강구하느라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하고 농업부문은 극도로 타격을 받았던 경험에 비추어, 정부는 앞으로 DDA협상 결과에 대비하는 국내 농업의 피해구제 대책과 경쟁력 향상 대책을 농가살리기 차원에서 미리 빈틈없이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관련 모든 정부부처가 통합지휘체제하에 계획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종합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Ⅳ. 인류미래의 희망, 쿠바 유기농업의 교훈

"인간의 삶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자. 정의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 모든 과학지식을 환경오염이 아닌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원하자. 생태계에 진 빚은 갚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자!"

〈피델 카스트로의 1992 리우 UN 환경과 개발회의 연설문에서〉

화학·기계화 농법으로 대표되는 현대 관행(慣行)농업이 한국을 비롯 세계농업에 뿌리내린 기간은 고작 50여 년, 화학제 농약없이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믿기 시작한 것도 기껏 40여 년에 불과하다. 그러한 관행농업은 최근에 이르러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추세와 더불어 자연자원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한 원인이 되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 마침내 1987년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는 제8차 위원회에서 「우리의 공동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의제를 공식으로 제기하였다. 경제발전 문제와 환경문제를 통합하여 접근한 문자 그대로 생태학적 자원순환체제를 강조한 새로운 제안이었다. 이제는 21세기 친환경 思潮의 큰 흐름으로 인류공통의 과제로 등장하였다. 북유럽, 캐나다에 이어 대규모 기업농 위주인 미국정부도 2010년까지 순 유기농업 비중을 1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나설 정도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유기농업은 환경보전적 기술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보전하고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측면과 농촌 지역(공동)사회의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다. 이 운동의 중심부분에는 언제나 가족농(family farming)이 있고 지역사회공동체가 있다. 이제까지의 대형 기업농(corporate farms) 또는 국영농장 중심의 생태파괴적인 대량생산·유통체제로는 인류와 자연생태계와 문명을 구제할 수 없다는 이른바 기업농적 개념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사회 지원농업(Community-Support Agriculture)」 운동과 「지역사회 식품안보(Community Food Security)」 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한국의 신토불이, 도농불이 운동도 이 범주에 속한다. 쿠바는 아예 공산체제하의 대형 국영 관행농업을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유기농업 체제로 전환했다. 대규모 국영농장은 대부분 개별 가족농과 협동경영으로 쪼개져 대체되면서 철저히 지역자원의 재활용과 순환농법 그리고 자연생태계와의 연계에 바탕을 둔 유기농 운동을 모든 도시와 농촌에 적극 권장하였다. 도회지의 공지에는 토상(土床) 농법과 지렁이 분변토와 유축농업 퇴비를 활용하는 도시형 유기농업이 적극 활성화되었다. 특히 여성 중심의 유기농업 추진과 중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대한 친자연적 영농체험활동(연 45일)을 학습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쿠바 유기농업 총책임자인 농업부 차관도 여성이고, 중앙 유

기농업연구소장도 여성이며, 유기농 관련 각종 연구소와 실행기관이 온통 여성 중심체제이다. "대지(大地)가 마치 어머니의 젖줄과 같이 국민을 건강하게 먹여 살릴 책임이 있다."는 카스트로의 주문에 따른 결과이다.

이렇게 온 국민이 한 덩어리로 나서서 노력한 결과 쿠바는 지금 식량자급률이 유기농업 운동 시작 이전의 43%(1990)보다 훨씬 높은 95%(2002)를 달성하였다. 총생산성도 초기 2년 기간에는 뒤떨어졌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일반 관행농업 생산실적과 비슷해지고 1997년 이후부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북한에서는 그 동안 200여 만 명의 인구가 기아로 쓰러진데 비하여 쿠바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육류 위주의 식생활 패턴이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국민건강 수준도 현저히 상승하여 병원 출입 환자 수도 30%나 줄어들었고 영아사망률이 세계 제2위로 크게 낮아졌다. 산림등 녹색지대 면적이 현저히 늘어나고 도시환경 생태계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10년 동안의 쿠바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을 거두어 이제는 세계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유기농업의 메카(聖地)」로 불리게 되었다. 쿠바유기농업의 성공은 농민의 자발적 참여와 일반 국민의 호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국의 과학자와 연구기관의 합작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배경과 동기는 1991년 미국의 경제봉쇄에 이어 구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해 화학비료(연간 100만 톤), 화학농약(연간 2만 톤), 그리고 석유를 원료로 하는 화학합성물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쿠바정부가 1991년 9월 「평화시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농정의 대전환을 꾀하게 된데서 시작했다. 쿠바는 식량 및 농업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전 국민적 과제를 근대 화학농업의 사슬에서 과감히 벗어나 유기농업으로 해결할 것을 시도했고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1992년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조사단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실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어떻게 쿠바가 생태보전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유기농업이란 틀 안에서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는 세계 인류의 큰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생태보전형 농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반면 생산성 향상 농업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오늘날 쿠바 유기농업 운동의 국가적인 성공은 그 동안 일반적인 인식의 오류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쿠바의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환경의 지속적 순환을 가능케 하는 현대적 생태문명체제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인류문명 발달사에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즉, 자원의 지역내 순환과 생산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생태계의 지속성과 농업생산성의 지속성, 그리고 생활양식의 전환을 동시에 이룬 "늘푸른 농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농약과 화학비료가 뒷받침한 종자혁명을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따지고 볼 때 "검은혁명(Black Revolution)"이었다는 것이 쿠바의 주장이다. 그래서 쿠바는 유기농업 운동을 "푸른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실현수단으로서 쿠바유기농업은 ① 사적 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적절한 토지개혁, ② 직거래 유통 중심의 시장개혁, ③ 지렁이 분변토, 토상농법 등 실용적인 흙살리기 운동 우선, ④ 유축농법등 현지자원재활용과 윤작, 간작, 휴경작 등 순환농업의 정착, ⑤ 전통농업 기술 및 자재의 현대적 부활(생물학적 현대과학기술과의 결합), 그리고 ⑥ 농민참여하의 현장 연구와 지역적응 시험의 중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각종 연구시험에 대한 농민 참여를 강조한 점이 특이하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의식주생활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생태계를 살리면서 농업 총생산량과 농가소득을 향상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농업생태학(agroecology)적 접근방법을 쿠바 유기농업 전개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장거리 수송에 따른 석유낭비를 줄이고 도시생태계의 환경개선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도시 농업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확고한 범국가적 철학과 원칙에 입각한 유기농업 운동은 우리나라에 큰 교훈이 되고 있다.

첫째, 현지 지역자원의 순환적인 이용과 有畜농업을 통한 농가 내부의 시너지효과(synergism)의 극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관행적인 것이건 유기적인 것이건 외래적인 투입요소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의 생태학적 기술과 요소를 농가단위 또는 마을 지역단위에서 적극 활용하는 농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토양 및 기후 조건에 부합하는 작부(作付)체계가 현장에서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넷째, 생물학적 유전학적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농가 내부와 주

변의 동식물과 작물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확고히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조상대대로 전수되어 온 전통적인 농가 농업지식과 자재를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로 삼아 거기에 다양한 생물학적 농업생태학적 현대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특히 유기농업 기술연구와 시험, 보급 과정에 반드시 현지농민들의 참여(participatory methods)를 전제로 하여 실시해야 한다.

필자를 비롯한 20명의 한국 유기농업 대표자들의 쿠바 세계 유기농업대회 참가와 현지연수(2003. 5. 22~6. 1)는 실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제5회 쿠바 유기농업대회에 참가한 27개국 600여 명의 각국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쿠바 유기농업 성공사례는 "인류 미래의 밝은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쿠바가 당면해 온 특수한 정치·경제 상황 때문이 아니다. 우리 지구와 인류 사회가 바야흐로 화학적 자원낭비형 농업의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돈의 논리를 좇아 억압과 수탈 그리고 전쟁이 20세기의 주요 의제였다면 21세기는 인권과 생명 그리고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생명, 인권, 평화를 위한 농업적 생활양식은 무엇인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쿠바 연수기간중 풀렸다. 바로 친환경 유기농업이다.

1석 3조의 축산퇴비 보내기 운동

끝으로 가장 시급하고 남북한에 두루 혜택이 되는 프로젝트는 북한에 유기질비료(퇴비)를 공급하는 일이다. 지금 남한 땅에는 축산분뇨가 과잉 방출됨으로 인해 산천이 오염되고 가축질병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반면 북한의 토질에는 유기성분이 부족하여 생산력 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축산이 미미하고 산림이 헐벗어 연료마저 부족한 형편에서 농림 부산물을 제대로 퇴비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지역별로 또는 전국 차원에서 축산 분뇨를 공동으로 수거하여 산림 및 농업 부산물(예, 숲가꾸기 사업의 톱밥과 이파리, 농작물 부산물 등)을 섞어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면 우리 환경도 살리고 국내 유기농업도 지원하며 북쪽에 보낼 경우 생산력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역단위에서 먼저 농민단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변의 국제정세가 불리할수록 오히려 남북한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는 일이야말로 당대 우리 세대의 의무이다.

V. WTO 체제하의 우리 농업의 유통대책

수입개방하의 현 단계 우리나라의 상업적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 농업이 소규모 가족농업(family farming)이라는 취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돌려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 현대의 농업생산은 "맛, 향기, 색깔, 모양 그리고 안전성"을 만족시키는 식품수요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값싼 농산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대량생산체제로는 대응하기 곤란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제는 소농구조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점을 활용하는 접근방법(예, 유기농업, 저공해 저투입 친환경농업)을 택해야 한다.

이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역설한 '제3의 물결', 즉 다양한 수요, 개성적인 상품서비스 시대의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 부응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국민의 수요성격에 맞는 다양한 신선식료품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일이 새로운 농업과제이다. 외국농산물이 아무리 값싸더라도 저장과 수송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각종 병충해 및 부패방지와 생육억제를 위한 화학적 처리(post-harvest treatments)가 수반되게 마련이다. 우리 국민의 味覺과 嗜好, 健康에 적합한 풍토식품과 低公害 또는 무공해 농산물은 小農經營체제하의 우리 풍토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국민소비자에 친근한 우리 '얼굴을 가진 농산품', 즉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 쌀, 쌀보리, 조, 콩, 고추, 마늘, 양파, 갓, 무, 유자, 배, 사과, 비자, 무화과, 산수유, 매실, 한우 등은 바로 우리 자신의 피와 살이다. '얼굴 있는 농산물'을 가꾸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해야 할 일은 ① 유기농법 및 저공해, 무공해 농법에 관한 친환경 농업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교육하고, ② 유기농업 또는 저공해 농업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특히 유기질 비료와 배양토, 각종 미생물, 제충제, 無公害 농약 및 천적 등의 적기, 적

소에 저렴한 공급체계를 확립하며, ③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한국적 또는 국제 기준의 '품질 인증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며, 다른 한편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원래 농업이란 단순히 작물을 기르고 가축을 하는 1차적인 생산행위만이 아니라 그 생산물을 저장, 보관, 가공, 수송, 판매하는 것까지 농민의 영역이었다. 이제 다시 농민 주도의 상업적 농업이 바로 이 영역을 다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대기업, 도시 독과점자본들에 의해 침식당한 농수산물, 식품가공업과 저장판매업을 농어민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원래는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새우젓 담는 일과 순대, 편육, 떡, 엿, 과자 만드는 일이 농어민의 고유 업종이었다.

과거 농수축협과 농정당국이 인식을 잘못하여 농어민의 고유분야를 타산업, 타계층에 모두 빼앗기고 이제 수입개방조치로 농수산업의 자체 영역마저 줄게 되었다. 게다가 농어민의 협동조합이 제 구실을 못해 그 동안 도시 독과점자본이 이리저리 농어민을 지배하며, 농어민의 고유산업분야마저 차지했다. 일부 정부의 이 분야 예산마저 기존업자들이나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이 피부로 그 혜택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부터 정부와 농업단체들은 '농업관련산업'을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케 하고 직접 농어민을 지원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지원의 저장, 보관, 가공, 판매 사업은 모두 농어민이 명실공히 직접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기득권 위주의 식품가공위생법, 주세법 등 구시대의 억압적인 관련법을 뜯어 고쳐 농어민의 가공업 참여 길이 활짝 열리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격 진폭이 해마다 또는 계절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환금작물에 대한 '가격안정대의 운영'과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대폭적인 보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모든 이익금과 수입농산물에서 수입업자와 가공업자가 챙기고 있는 판매이익금 모두 농업개발 및 유통개선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특히, 채소, 과일, 축산물 등 신선식료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경로 보장, 그리고 가격지지는 정부만이 아닌 농어민 자신과 협동조합의 의무이다. 그리고 쌀등 주요농산물의 가격보장을 계속해야 하되 UR에 대비하여 1999년부터 실시한 직접지불에 의한 소득보상(예, 환경보존 및 경관보존 지원 등) 방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농업인들로 하여금 계속 농지를 보전하며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

산상의 불이익을 감수케하는 대가는 그 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 혜택과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는 희생이므로 국민소비자와 정부는 국가예산으로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적극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넷째, 소비자 단체와 농민 단체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 농업이 쇠퇴하면 일차적으로 농민생산자가 몰락하겠지만 결국은 소비자인 국민대중의 생존권, 안전성, 건강, 생명 그리고 생활환경이 위태로워진다. 이는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농민들을 한데 묶어 굳건한 공동체 의식하에 농업문제와 도시문제를 공동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활을, 소비자는 생산농민의 생활"을 서로 보장하는 실천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때이다. 도·농간의 직거래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1999년 정부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육성법'을 제정하였으나 도시소비자를 조직화하고 농촌생산자 조직 및 농축수협 협동조합과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는데 지원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성이 결여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국민건강을 외국농산물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마당에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검사·검역 제도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국가적 직무유기 행위이다. 모든 수입 동식물은 물론 수입 가공식품과 그 원료에 대해서도 原産地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국토방위에 못지않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방위하는 검역·검사·방역 체제를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것은 제2의 國土防衛(국방)행위이다.

여섯째,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수비형으로부터 공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수출주도의 농업으로 육성하지 위한 생산, 가공, 유통정책을 과감히 강구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거국적인 과학기술과 자본투입을 전제로 한다. 수입개방에서 잃은 것을 수출확대로 보상받으려는 적극적인 농정으로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각종 농업무역기관(예, 농수산물 유통공사 또는 대한무역진흥공사)과 연계하여 지방특산물과 농산물의 수출선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민생산자들에게 정부가 신뢰받는 행정을 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 정부는 농민들을 도시민 또는 타산업 종사자와 똑같이 한 국민구성원으로 그 생존과 생활을

보호, 책임질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칠레 FTA 협정 비준 사례에서 보듯 지금처럼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귀찮은 존재인양 인식하는 풍조부터 없애야 한다. 그 동안의 희생을 높이 평가하고 WTO협상이든 또는 어떤 경우든 어떤 형태로든 농어민의 장래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신임을 농어민들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이 신뢰관계만 제대로 형성된다면 나머지 대책은 오히려 기술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일곱째, 이제는 싫든 좋든 정보화시대, 국제화시대, 상업농화시대에 우리 농업이 진입해 있음을 농민생산자들은 심각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외 정세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과학적인 영농기술과 협동경영, 나아가서 농업생산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 및 가공 산업에의 참여주체로서 부단한 경제, 과학기술의 농업에의 응용과 시장정보의 영농반영에 한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바꿔 말해 세계 속의 농민, 과학적인 생산자, 장사를 아는 농민, 가공·저장·수송에 능한 협동하는 농민, 나아가서 시장수요변화와 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농민, 그리고 홈페이지 개설 등 전자상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농민, 이것이 비록 험난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오늘날 우리 농민이 요구받고 있는 새로운 농민상이다. 따라서 농민생산자들이 스스로 개척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시대 소비자들의 기호와 식관습을 제때 옳게 파악하고 기술개량과 고품질 안전식품의 생산에 주력하는 일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핵가족화된 도시소비자들의 식관습 구조가 가격문제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바뀌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선한 식품, 안전한 식품, 소량구매와 조리에 편리한 식품, 잘다듬어졌거나 가공된 형태, 그리고 연중 고른 수요를 나타내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수요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대적 농업경영 기술 향상과 농민 대응이 필요하다.

여덟째로 유통혁신은 생산단계의 상품화 전략과 더불어 소매(소비)단계의 유통비용 절감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금 산지의 양파 값이 1kg 140원인 반면 소매값은 500~1,000원 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만일 소매단계의 임대료와 인건비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올라만 갈 경우 이상의 격차 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유통혁신조치로서 ① 산지수집시설 확대, ② 소비

자 기호에 맞는 산지에서부터의 소포장개발 및 포장, 등급, 선별 시설 보조, ③ 산지 수송수단 지원, ④ 농업생산자들이 자기 농산물에 '자기 이름, 자기 가족 얼굴, 상표 붙이기 운동'의 전개, 나아가서 농장마다 '간판 달기, 명함갖기 운동'의 확대, ⑤ 이제는 도매시장 지원보다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상점의 획기적인 비용절감 지원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식품취급점포의 세금감면과 상가분양시 식품점포의 실비분양 및 영구임대 조치 등, ⑥ 농민주도의 가공 및 저장 식품에 대한 도시내 판매장 제공 및 광고선전 활동 지원, 정부의 품질보증제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⑦ 외국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중앙정부의 기존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와 농어민 생산자단체에 이양하여 지역농업개발 차원에서 직접 농어민에 대한 보조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개방화의 피해를 피해 나가는 지혜이다. 그 일환으로 저장, 가공, 수송, 유통 등 유통근대화 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 및 시설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세원도 더욱 늘려 확보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유통의 개혁 없이는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우리는 지금 크게 깨닫고 국력을 동원하여 저장, 보관, 가공, 수송 등 物的 유통시설의 획기적인 강화와 유통방식의 혁신을 거국적으로 농협조직을 앞장세워 官民이 협동하여 실천해야 한다. 총론적인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현장에서 각 부문과 기관이 농민이익 최대화원칙에 따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혁작업을 각자 실행에 옮겨야 할 때이다. 특히 UR이 타결되고 WTO체제가 가동될 경우 국제 식량 및 농산물시장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을 크게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필요한 농산물의 합리적인 수입방법과 저장, 보관, 비축 대책은 국민생존권의 확보라는 국가·국민 안보차원에서 사전에 대비가 있어야겠다.

Ⅵ. 또 하나의 대안: 도농연대의 상생운동

3차 5개년 계획(1972~1976)이 끝나면 "그늘진 응달과 농어촌"에도 따뜻한 볕이 들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은 작고하기 직전 당시 경제기획원 고위관료들이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쌀과 농산물 수입개방을 주장하자 크게 노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뼈 빠지게 희생하며 내조한 조강지처(糟糠之妻)를 좀 살게 됐다고 헌신짝처럼 내팽겨 치면 누가 농촌에 남아 식량주권과 지역사회를 지킬 것인가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 서울 등 대도시는 지난 30여 년 사이 이농민들의 급격한 난입으로 일찍이 초만원 사례를 거듭하고 있다. 주택난, 상하수도난, 교통난, 환경오염에 도시 범죄마저 무척 심해졌다. 농민들을 농촌에 그대로 살게 하면서 정책지원을 계속하는 것보다 이농에 따른 추가적인 도시 투자비용이 17배나 더 든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그래서 신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나왔고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수도권과 대도시의 과밀 현상은 본질적으로는 농어촌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물인데도 그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다. 농업문제가 무대와 주제를 바꿔 도시문제로 둔갑한 것일 뿐이다. 이제는 농어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왕의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웰빙을 위해서라도 농어민들로 하여금 농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농촌 어디를 가보아도 삶의 질과 조건이 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두고 말한다. 반면, OECD 선진국 회원국인 한국의 도농(都農) 격차는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의 후진국과 다를 바 없다. 누가 시장경제가 좋고 자유무역주의가 좋은 줄 모르는가. 정책의 시행결과 재미 보는 사람, 혜택 보는 산업이 따로 있고, 피해 보고 고통받는 사람(산업)이 따로 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종국적으로 이런 사회는 지속성(sustainability)을 잃게 된다.

지난 40년간 고속경제 성장과정에서 고전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서 특히 도시와 농촌, 상공업과 농어업이 각기 승자와 패자의 반대방향의 길로 나뉘어 서로 외면하며 걸어 왔지 않은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농촌·농업 살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자

유시장경제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보다 우월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상생의 사회경제 정책들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위정자와 경제단체와 경제학자 중에 시장경제가 좋다는 말만 할줄 알지 어떻게 농어촌·농어민을 지원하는 것이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실천에는 외면하는, 본말이 전도된 이론가들 투성이다. 균형추를 잃어버린 비교우위론, 삶의 질을 망각한 국제경쟁력 우선론 등 일방적인 자유주의 주장 일변도뿐이다.

도시도 살고 농촌도 살며, 기업과 농업이 공생공영 하자는 농촌사랑 캠페인이 그 첫걸음이다. 이 운동에 대한 도시 산업 부문의 호응이 중요하다. 과거에 흔히 보아왔던 단순한 자매결연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확고한 비전과 의제를 가지고 도농이 함께 공생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는 철학이 중요하다. 단순한 노스탈쟈(향수)가 아니라,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나라가 선진화될 수 있다는 신념이 배어 있어야 한다. 시건방졌던 "브로나르도(민중 속으로)" 운동으로서는 안 된다. 농촌 마을은 마을대로 당당하게 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친환경농산물과 아름다운 경관, 향기로운 문화 전통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연생태 환경을 자산으로 삼아 대기업 샐러리맨들과 맞장을 뜨자고 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상공업인과 농업인이 서로 재미 보며 함께 고루 잘 살자는 공생공영(共榮)의 상생 운동이 바로 이 같은 철학에 근거해야 한다. 오늘날 도시민이 추구하는 웰빙(Well Being)에 농촌만이 갖고 있는 특유한 쾌적함(amenities)을 결합할 때 일과성(一過性)이 아니라 영속성이 보장되는 도농 상생 운동이 가능하다. 그 예지가 바야흐로 문화일보와 전경련, 농협 등의 참여하에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경제성장의 응달진 그늘에서 정부로부터 소외되고 경시되어 온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따스한 볕을 들게 한 1사1촌 운동은 그래서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

참고로 경실련이 1997년 1월 1일 「제2의 UR에 대비하자(김성훈 著)」에서 제시한 우리 농업 살리기 열 가지 염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강과 바다와 산과 논밭을 선조들께 부끄럼 없이 아름답게 가꾸고 소중히 생명을 이어가는 나라.

둘째, 농촌, 농민이 잘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나라.

셋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몸에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넉넉히 생산하는 나라.

넷째, 농민은 도시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도시민은 농민생산자의 삶을 보장하는 나라.

다섯째, 농업도 살고, 수출기업도 살고, 국제수지도 알뜰히 균형을 맞추는 나라.

여섯째, 주식(쌀)만은 안심하고 자급자족하여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나라.

일곱째, 농사짓고 살아도 농민이 도시사람과 다름없이 교육과 의료, 복지, 문화 혜택을 골고루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

여덟째, 선조들이 알뜰히 일궈놓은 전통과 문화 옛 슬기 위에 현대적인 도시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우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나라.

아홉째, 정치인도, 지식인도, 정부와 재계 언론사회도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문자 그대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인 나라.

열째, 다국적 초국경 기업들로부터 배달겨레 후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고 농민과 소비자, 정부(農·消·政)가 슬기를 함께 모아가는 나라.

이러한 나라가 좋은 나라이며,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Ⅶ. 끝맺는 말 : 茶山의 「3農정신」과 J. R. 힉스의 「보상의 원칙」

과문일지 모르지만 올해(2004)만큼 농민들의 마음을 깊은 시름과 불안에 떨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이 휩쓸고 가 어느 때보다 자연재해가 큰 때문만이 아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우리 농민들을 다 죽인다.(WTO Kills Farmers.)"라고 외치면서 자결한 故 이경해(李京海) 씨의 비보는 세계 NGO 농민들과 함께 우리

농어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울적하게 만들었다. 국내에서도 이경해 씨에 이어 동반 자살하는 농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알게 모르게 100여 명의 농민들이 빚에 쪼들려 목을 매달거나 살 길이 막막해 농약을 먹고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않던 우리 사회의 비정함과 정부당국의 무관심이 농업인들을 자포자기케 한 시름의 근원이 아니던가. 한 때나마 공직에 몸담았던 필자 역시 자괴감(自愧感)에서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

외형상으로는 5천 여 년을 이어온 생명농업을 단순히 교역대상의 무역상품으로 취급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탓이라고 지목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보다도 우리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당한 계층은 농어민 약자들이고, 다른 한편 그 혜택을 보는 상공인 계층은 따로 잘 살며 국론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비극의 씨앗이 내재한다. 후자들(재계와 무역계)이 국내외 여론을 만들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들만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과 언론기관을 지배해온 사회가 다름아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한다면 과언일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그 나라 경제발전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재벌과 상공세력을 민초들이 끊임없이 공적(公敵)으로 규정하고 지탄하는 사회는 한국뿐이다. 시장경제와 무역자유화가 오늘날 서구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지구상에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저변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힉스(J. Hicks) 등의 "보상의 원칙(Principle of Compensation)"과 롤즈(J. Rawls) 등의 "최약자 보호준칙"이 언제나 살아 뒷받침해왔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는 부유층과 재벌규탄의 소리가 그리 심하게 들리지 않은 원인이 바로 이 같은 경제정의(經濟正義)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계층이 그로인해 손실을 본 계층에게 보상의 원칙에 따라 간접 지원을 하거나 직접 이를 실천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해왔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 같은 분배정책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기본체제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찍이 다산 선생이 갈파한 "농업을 상업만큼 이롭게 후히 대접하고, 공업만큼 편리하게 도와주며, 농민을 사회적으로 선비만큼 높이 대접하는" 후농(厚農), 편농(便農), 상농(上農)의 "3농의 정신"이

새롭다. 이는 바로 힉스와 롤스보다 훨씬 앞서 다산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원칙 속에 살아 있었음을 뜻한다. 요컨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과 자유무역주의가 성공하려면 사회·경제 정의(正義)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하며 모든 경제정책의 필수 준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이 같은 "보상의 원칙"을 실천해옴으로써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공산주의 평등주의체제를 압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정부와 재계와 언론은 이 원칙의 실행에 대하여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시장경제의 수월성과 자유무역의 이점만 강조한다. 그래서 UR 때건 , DDA 또는 FTA 이건 이 지구상에 유독 대한민국 농민들만이 다투어 머리를 삭발하거나 심장에 칼을 꽂고 있는 것이다.

농어민들이라고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개방화로 무역입국을 해야 좋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막상규모의 경제성을 높이려 땅 한 평을 더 늘리려해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인 땅값을 어디서 조달하고, 농업수지는 누가 보장하며, 오갈데 없어 기왕지사 농사로 연명하고 있던 노인네들을 어디로 내 보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빈약하고, 반면 원론적인 주장만 요란하다. 가격을 내려 국제경쟁력을 높이라지만 미국보다 비싼 땅값과 인건비와 자재비, 그리고 6.5~10%나 되는 상호금융 이자를 무슨 수로 감당할 것인가. 수조원의 부채를 내고 망해간 대기업의 주인은 공적 자금으로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허약한 농어민들은 속수무책이다. 농민들의 부실경영 탓이 아닌 정책환경 변화로 인한 농가부채는 IMF 하의 기업 및 은행부채처럼 공적 자금으로 소각할 수밖에 없는데도 유독 정부의 농가부채 해결기준에 대해서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2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13년간 119조 원의 농어업 10개년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과거 역대정부의 농업투자계획과 별 다름없이 1년치 농업예산과 기금을 합쳐 발표한 뜻 외에 별 의미가 없다. 다만 42조 원 투융자사업은 농가자부담액이 포함됐고 지방 정부자금마저 포함돼 총액 중 중앙정부 투자분은 23조 원뿐이었던데 비해 그나마 중앙정부예산과 직접 투자분이 많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음이 평가할만 하다. 명목상의 농가 자부담 금액까지 42조 원 사업에 포함시켜 부풀려 선전해 온 허구적인 숫자놀음이었음을 대한민국의 지식인과 언론인들만이 모르고 있다.

또 농어업투자계획이 얼마나 부실하였는지, 예컨대 정부권장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와 기술교육도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부은 각종 농업구조개선사업과 첨단 농업기술 및 현대화 계획이 대부분 IMF/WTO체제하에서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둔갑하였다. 앞으로 농민들을 더 큰 빚더미에 몰리지 않게 농업투자가 제대로 내실을 거두자면 오늘의 농어촌 현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엄정히 반성하고 평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농정이 농촌·농민 대책을 빠뜨린 채 농업증산정책 일변도였던데 문제가 있다. 농촌의 교육, 의료보건 복지 문화 대책은 갈수록 위축되고 농어업 생산·유통대책만 농림부가 전담하다보니 실제 농어민의 삶의 질 문제는 정부 다른 부서들의 정책대상에서 소외상태로 방치되어 왔었다. 교육부·행자부·보건복지부·산자부·건교부·여성부 등 정부 부처가 모두 나서야 하고 제 몫을 하도록 청와대와 총리실이 책임 독려해야 한다.

2만 달러 국민소득을 이루겠다는 현 정부의 야심 찬 계획도 그 저변에 있어 앞서 말한 "보상의 원칙과 최약자 보호준칙"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태생적으로 시장실패와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빈익빈, 부익부, 도농격차, 계층간 갈등, 환경생태계 파괴, 농어촌 피폐로 이어질 뿐이다. 그래서 이제는 농촌·농업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 소비자를 포함한 온 국민의 문제라는 사실을 뜻있는 사람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절절히 느끼고 있다. 선진국이란 농촌과 도시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분야가 차별없이 균형있게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도 우리 사회지도층을 비롯 부유층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수입·수출로 재미보는 재계지도자들과 상공인들부터 솔선하여 농업·농촌 살리기에 앞장서야 우리 경제와 사회가 균형있게 안정되게 번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진국의 기업인들처럼 균형감을 가지고 인식했으면 한다. 또다시 얼마나 많은 수의 제2·제3의 이경해 씨가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끊어야 우리 사회는 각성할 것인가. 얼마나 전국의 산하가 도시화·산업화로 황폐되어야 농업과 환경생태계의 소중함(다원적 기능)을 깨달을 것인가. 더 이상 이 땅에 지속불가능한 경제·사회 구조가 굳어지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도시, 농촌할 것 없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골고루 더불어 잘 살자."는 다산 선생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WTO, FTA 그 무엇이 닥쳐와도 '대한민국 농업인들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실히 끌어 올리겠다.'는 최고 통치권 차원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때이다.

◈ 참고문헌 ◈

고승제 (1995), 『다산을 찾아서』, 중앙일보사.

권오상 (2000), "농업의 다원적기능 관련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

김동수 · 엄기철 외 (1994), 『논 왜 지켜야 하는가』, 따님출판사.

김성훈 (2001), "WTO 체제하의 한국농업의 위기와 전망", 한국농업과학협회, 농촌진흥청.

_____ (2003), "쿠바의 유기농업 성공의 교훈", 한국유기농업학회.

_____ · 권광식 (2003), 『자원 · 환경 경제학』, 방송통신대 출판부.

김정호 (1996), 『전남의 옛터 산책 (상, 중, 하)』, 향토문화진흥원.

김형효 (2000), 『원효에서 다산까지』, 청계.

농림부 (2004), 『통계로 보는 세계속의 한국농업/2004 쌀 협상』.

대우학술총서 (1986), 『丁茶山과 그 時代』, 민음사.

박 현 (1995), 『우리 사상의 고향을 찾아서』, 백산서당.

박무영 역 (2001), 『뜬세상의 아름다움』, 태학사.

박석무 역주 (1985), 『다산 散文選』, 창작과 비평사.

박석무 (2003),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박재용 (1993), 『정약용과 목민심서』, 유한문화사.

송재소 역주 (1981), 『茶山詩選』, 창작과 비평사.

양광식 편역 (1997), 『康津과 茶山』, 강진문화연구회.

오호성 (2002), 『환경경제학』, 법문사.

이을호 역 (1982), 『목민심서』, 현암사.

이익성 역주 (1984), 『茶山論叢』, 을유문화사.

이재옥 · 임정빈 외 (1999), "WTO 차기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연구", KREI.

장동희 (1986), 『정약용의 行政思想』, 일지사.

정성철 (1987),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한마당.

정약용 (1805), 『示二子家誡』.

조유식 (2001), 『정도전을 위한 변명』, 푸른역사.

최정섭 (1999), "수출국의 차기농산물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 UC Davis.

환경농업단체연합회 (2003), 『쿠바의 유기농업: 인류미래의 희망』, 농수축산신문사.

Kim, Sung-Hoon (1995), Agricultural Market Opening and Economic Security, *Korea's Economic Diplomacy*, The Sejong Institute, Seoul.

Laster Brown (1996), Tough Choices, W.W. Norton & Company, New York · London.

Mark Ritchie (1993), Breaking the Deadlock: The United States and Agriculture Policy in the Uruguay Round,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Minneapolis, October.

Mauritius Ministry of Agriculture (2001),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n-Trade Concerns, Mauritius, May.

Park, J. H. (1993), Rice Production in the Monsoon-Asia Climate, *Rural Review*, Vol. 20, No. 2, Seoul, October.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n-Trade Concerns (2001)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Technology and Natural Resources, Mauritius, May 31.